

광주시-광산구 이번엔 하위직 인사교류 충돌

市, 자치구 7·8급 전입 인사 계획서 광산구 제외 보성군도 전남도 초임 사무관 과장급 배치에 반발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이번에는 하위직 인사교류를 놓고 또다시 충돌한 데 이어 보성군도 전남도의 인사교류에 반발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산하 5개 자치구에 대한 하위직(7·8급) 전입 인사 계획에서 광산구를 제외했다. 시는 전입 시험을 거친 행정직 19명과 면접을 본 9명 등 28명에 대한 전입인사를 늦어도 이번 달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광산구의 행정직 3명은 제외했으며 기술직 대상 인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부구청

장 인사 교류 갈등이 하위직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정원초과임에도 4급을 자체 승진시킨 뒤 광주시에 지방부이사관(3급)을 부구청장으로 받아들일 테니 구청 서기관(4급·행정직)의 시 전입을 받아들여 탈락하며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행배 광산구청장은 특히 이달 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광주시가 관행을 이유로 인사감(甲)질, 탐욕, 야만적 행위 등을 하고 있다”며 막말 수준의 비난까지 쏟아내는 등 광주시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광산구는 최근 이번 인사교류 갈등에 대해 타 자치구에 사실상 공동 대응을 희망하는 설문조사를 보내는 등 힘 모으기에 나서고 있지

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체제인 동구를 제외한 서구, 남구, 북구에 ‘광산구의 4급 요구에 대한 당위성’ 등을 묻는 설문지를 보냈지만, 해당 자치구들이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구청장 인사교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위직 인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보성군도 인사교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성군 공무원노조는 25일 전남도가 초임 사무관(5급)을 군의 과장급 간부로 배치한 데 대해 “전례가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단행된 전남도 인사에서는 중견 간부 직무 경험에 없는 초임 사무관을 보성군 과장급 간부 내정자로 발령했다”며 “소속 기관의 공무원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는데도 전남도가 우월

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보성지역 공무원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성군의 경우 전남도 지사가 부군수를 포함해 사실상 5급 이상 인사권을 5자리나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성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보성군수의 인사권한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조가 내놓은 ‘22개 시·군 5급 사무관 현황’에 따르면 보성군은 도 출신 사무관이 4명으로 목포시 6명, 신안군 5명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지역은 대부분 1~3명 정도였다.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에 기초와 광역간 실질적인 1대1 인사교류 실시 등을 요구하고 보성군수에 대해서도 산하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시·군 교류 인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 취임 “만성 운영적자 사업장 최우선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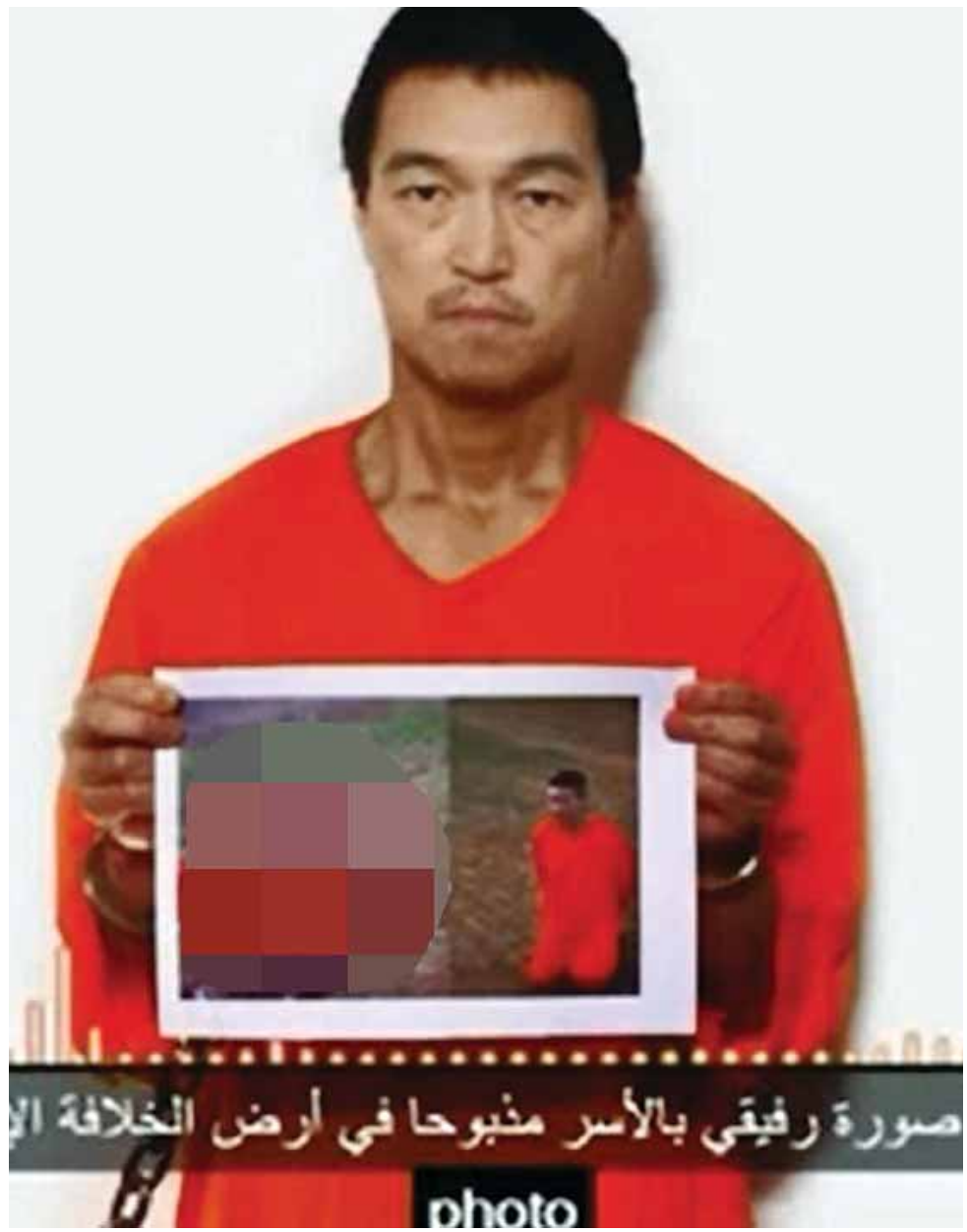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 제6대 양지문(58·사진) 사장이 지난 2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양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사는 지난 10년간 자산 1조2000억원의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엔 공기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수행, 과도한 부채 등을 안고 있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어 “만성적인 운영적자 사업장은 매각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매각을 위한 가치상승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할 것”이라며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우선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출신인 양 사장은 목포고를 졸업하고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5·18구속자동지회 부회장, 국회 의원 보좌관, 옛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부위원장, 전남도 중소기업특보 등을 역임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전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지난 10년간 남양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IS, ‘일본인 살해’ 영상 공개... 日 충격

“용납할 수 없는 폭거” 맹비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되는 세력에 납치된 일본인 인질 중 한 명을 살해했다는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일본 열도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영상 메시지의 존재는 지난 24일 밤 11시를 넘겨 일본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애초 일본 정부가 몸값 시한이라고 해석한 23일 오후 2시 30분을 하루 이상 넘기도록 억류 세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인질이 아직 무사한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취약 시간대에 갑자기 ‘인질을 살해했다’는 메시지가 유출되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관계 각료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는 “언어도 단”, “용납하기 어려운 폭거”라는 표현을 쓰며 억류 세력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테러에 굴

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굳은 표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평소와 달리 질문을 받지 않았다. 평소 좀처럼 침착함을 잃지 않는 스가 장관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인질의 이름인 ‘유키카와 하루나(湯川遙菜)’를 ‘하루나 유타카’라고 잘못 말하다가 나중에 다른 직원이 알려줘 정정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영상 메시지가 기존 공개되던 동영상과 달리 사진에 음성을 덧붙인 것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나가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등 관계 각료들은 인질의 생사 등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확인하고 발언하겠다”, “아직 확인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일본인 유키카와 하루나(湯川遙菜) 씨와 고토 겐지(後藤健二) 씨가 납치된 가운데 유키카와 씨가 살해됐다고 설명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고토 씨로 보이는 인물이 사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등장하며 “당신들은 나와 함께 갇혀 있던 유키카와 하루나 씨가 살해된 사진을 봤다”는 영문 음성이 덧붙여 있다. /연합뉴스

“현재 치명적 오류... 정당해산은 부당” 전 통진당 의원들, 재심 청구키로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이 현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해산심판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현재의 사실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현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정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병운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법원과 현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다”며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을 대리인단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 법원인 현재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 해석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현재로부터 영력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배제 추진

전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현 지사 재임기간에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이낙연 지사 재임기간에 승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공무원 특별대책’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 공무원과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 장(과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방안도 추진한다. 음주운전 공무원은 일정기간 정무포상에서 제외하고, 징계받은 음주운전 공무원은 일정기간(연차 6개월·감봉 1년·감봉기간·정직 1년(6개월+정직기간)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감액하기로 했다. 얼마를 감액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